

#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원하는 게 큰 욕심인가요

의정단상



이명노  
광주시의원

벌써 세 번째다.

광주시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8개월 차, 물과 관련된 사건 사고만 세 번을 경험한다. 꾸준한 걱정거리인 가뭄까지 포함하면 총 네 건의 물 관련 문제, 두 달에 한 번꼴로 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 이제는 안전한 식수를 공급 받는 일이 욕심인 건 아닌지, 필자가 과한 걸 바라고 있는 건지 고민까지 든다.

당선되고 곧장 다가온 가뭄에 대한 전망과 물 부족 문제 대안 마련은 어느새 광주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됐다. 2021년 말부터 예견됐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발등에 불뿔이 떨어진 채로 대처하기 시작한 것이다. 필자는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4수원지(각화정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선불었으며 심각한 가뭄이 우려되는 광주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체 수원 마련과 물 부족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으나, 안이한 대처로 결국 제한 급수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물 절약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도 다행이다. 모두의 동참으로 제한급수 시기를 늦출 수 있었다.

하지만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수질

사고도 아니고 단수사고였다. 지난 12일, 덕남정수장의 단수 밸브 노후화로 인해 단수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인명 피해는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자칫하면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었던 사고였다. 11년의 내구연한이 훌쩍 지난 30년째 동작 시험도 없이 방치했던 단수밸브와 지켜지지도 않아 종이 낭비에 불과했던 사고 대응 매뉴얼이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였다. 기우제라도 지내는 심정으로 물 절약에 동참했던 시민들은 황당한 사고로 5만7000톤의 식수와 함께 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이에 16일 광주시의회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고 상황 발생 당시 당직자가 누구였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행정의 민낯을 확인했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12일 사고의 긴급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14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긴급 현장 방문에 나섰다. 당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들은 조치 상황 보고를 마친 뒤 부랴부랴 이동했다. 세 번째 사고였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 백운광장 상수도관이 파손되며 관로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가 아낀 물은 또 다시 바닥에 흩뿌려지고 말았다. 수도관망의 데이터 관리 실태가 의심스러운 사고였다.

마지막으로 22일 오전 8시15분 서구 양동복개사가 하부에서는 노후화된 상수도관이 파손되며 누수가 돼 지난 8개월간 4건의 사고를 만들어냈다. 잊지도 않은 승강기가 도면에는 있는 것처럼 나와 교통약자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던 양

동시장역의 혈관들이 외부 요인도 아닌 자체적으로 터진 것이다. 사사건건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고들로 물 절약 동참을 요구하던 광주에 시민들이 느낀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8개월의 임기 중 겪은 4건의 물 관련 사고들, 이것은 비단 물로 인한 사고들이 아니었다.

인간에게 필수적인 물에 투영된 광주 행정의 오랜 문제들이다. 가뭄 전망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가 이뤄졌더라면 절수 동참을 시민들에게 호소하지 않고도 위기 모면이 좀 더 수월했을 것이다.

또한 제때 설비를 관리하고 보수했다 라면 역시 단수사고는 없었을 것이고, 매뉴얼을 지키며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다 라면 그 피해가 적었을 것이다. 공사에 앞서 관망에 대한 빠른 데이터 파악과 전달이 이뤄졌더라면 공사 중 파손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설계도면 대로 배관을 설치했다 라면 누수 될 정도로 노후화된 상수도관은 시설 진단 과정에서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다.

예로부터 이수(利水)와 치수(治水)는 정치의 근원이었다. 오늘날에서야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이 정상인가. 치수 실패로 대두된 그간 광주 행정의 누수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을 알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성공하는 시정의 첫걸음이라 진단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건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안정적인 광주를 원한다.

## 社說

### 여수국가산단 국세, 지역 환원 절실하다

97% 국가귀속...지역재원 부족

전남도가 울산시와 함께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와 울산시는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생명권을 지킬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양 지자체가 세제 개편을 주장하는 이유다. 장기산업의 특성상 항상 사고의 위협에 노출된 국가산단의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하다.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첨단·전략 산업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폭발과 화재가 빈번하고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 등으로 산단 주변 주민의 생명권도 위협받고 있다.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가스누출 사고는 모두 560건으로 776명의 인명피해와 127억 여 원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최근 5년간에도 121건의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을 당했다. '공인된 화약고'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더라도 여수와 울산 국가 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 (12조4216억원)가 국가로 귀속되고 있다. 여수 석유화학산단은 지난 2021년 기준 국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4조 1708억원에 달한 반면 전남에 배분되는 금액은 410억에 불과했다.

정부는 국세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에 나서야 한다. 재난관리와 환경보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인 국세 중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것도 방안이다. 정유정제와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은 당연한 일이다. 오염물질량과 위험물질량이 현행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불합리하다. 국가 산단은 지역의 희생을 통해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런 국가산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산기지의 기능만 존재하는 국가산단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 재정권 지자체 이양 지방대 위기 탈출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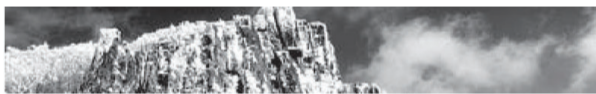
광주시, 시범사업 선정에 만전

신입생 모집난 심화 등으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집행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광주시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조원 이상의 대학지원 재정의 배분을 위한 지역 전담 기구 설치 체계를 구축하는 'RISE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운영해본 뒤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 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자치단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재정권 이양을 통해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고, 학령인구 감소와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정책 도입 취지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미달사태는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집계 따르면 2023학년도 수시·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선 광주·전남 대학은 각각 아홉개교씩

18개교에 달했다. 지방대 위기를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광주 전남 대학들이 엄연한 현실로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정원에 미달하는 등 지방대 위기가 본격화됐고, 대학측의 자체 혁신과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이같은 지방대 살리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육성을 통한 대학살리기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등과 순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 교육행정의 전문성 결여와 대학 줄세우기, 교육 자율성 침해 등과 같은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가만히 앉아서 교문을 닫는 날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위기 탈출을 도모하는 것 이외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도 부정할 수 없다.

광주시가 정부 정책에 부응해 현안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역 역량을 결집해 실효성 높은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서석대



서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치권이 극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인 민생경제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쟁점 법안을 절차대로 마무리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국내 쌀값이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데 대한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기름값,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 대출 이자 등 모두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유일하게 농민들의 목숨값인 쌀값만 끝없이 폭락하고 있다"는 농민의 반발을 반영한 조치

### 정치권 양곡관리법 속의

다. 한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생각과 다르다. 정부와 여당은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초과 생산분을 정부 차원에서 보전할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며 '선심쓰기용'이라고 입법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료를 제시하며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되레 쌀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쌀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쌀값을 보장해줄 경우 농가들이 대체 작물 재배 등과 같은 쌀 적정생산 정책을 등한시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전락작물(논콩, 가루쌀)직불금을 신규 도입하고 벼재배 면적 감축 협약 농가에 대한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별 타작물 재배 별도 지원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오는 2030년께 60만톤 이상이 초과 공급되고, 쌀 격리에만 1조387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달 쌀 수급안정 대책을 담은 지침을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 내려보냈다. 정부 지침 내용에는 기존 다수확품종 재배를 대폭 줄이는 대신 고품질품종을 2025년까지 50%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다수확품종의 경우 연차적으로 공공 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한키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는 '진광', '새일품', '황금노들' 품종, 2024년부터는 '신동진' 과 '새일미' 품종에 대해 공공비축미 매입을 양기로 했다. 지난해 전남도의 전체 쌀 재배면적 중 신동진은 20%, 새일미는 4%를 점유하고 있어 2년후면 이들 품종이 퇴출될 운명에 처해졌다. 다행히 전남의 벼 재배 주요품종 '새청미' (전체의 50%)에서 정부정책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신동진과 새일미 재배 농가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처럼 정치권의 양곡관리법 개정과 정부 정책은 언박자를 내고 있어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빠진 벼재배농가들을 혼란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다. 쌀값 안정은 국가와 국민, 재배농가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 식량안보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한데 쌀소비 급감과 농산물수입이 자유로운 자유무역체제라는 현실을 무시한채 정부가 쌀가격을 떠받치면서 쌀산업을 지속할 수는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격이 오름에도 유일하게 쌀값만 최대 폭락하는 비정상적 상황은 이 문제에 대해 권관마다 미봉적 자세로 일관한 탓이 크다. 근본적인 해법 찾기 보다는 화난 농심을 잠재우는 데 급급해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식량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농가 피해도 최소화하는 선에서 관련법 개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파급력이 크고 정부 관련 정책과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유권자 관심 사기가 아닌 무엇이 최선인가에 초점을 두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이기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